

# “중전선언, 3자·4자 형식보다는 실제 이행 여부가 더 중요하다”

靑, “꼭 3자 여야한다 말한적 없어”

청와대가 남·북·미 3자가 참여하는 중전선언 외에도 중국을 포함한 '4자 중전선언'을 배제하지 않고 있음을 밝혔다.

아울러 3자 또는 4자 형식보다는 실제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으로 덧붙였다.

청와대는 31일 판문점선언에 담긴 중전선언 추진과 관련해 “3자 중전선언이 될지 4자 중전선언이 될지는 가늠할 수 없지만, 4자 중전선언에 대해서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논의에 따라서 (4자 중전선언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는 그동안 중전선언 주체로 남북미 3자를 강조하는 것으로 보였는데, 북미정상회담 이후에는 중국을 포함한 남북미중 4자 중전선언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보인다”는 질문에 “저희가 꼭 3자여야 한다고 얘기한 적은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제까지는) 중전선언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적대적 관계에 있는 나라들끼리 선언하는 것이 자연스럽게기 때문에 중국이 중전선언에 참여하는 것이 자연스러우냐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던 것”이라며 “이렇게 말할 때도 ‘중국이 참여한다고 하면 못할 것도 없다’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3자 혹은 4자 등) 형식적인 면보다는 이행이 되느냐 안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은 중국을 포함한 4자 중전선언을 선호하는 것이 맞나’라는 질문에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일부 언론이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 회담에서 중전선언을 두고 북미 간에 의견대립이 있었고, 청와대는 중전선언 성사에 대비해 미리 중전선언문을 만들었다'고 보도한 데 대해서는 “(북미) 양 정상 사이에서 논의가 오간 것이라 정확히는 알 수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중전선언 문제는) 정상 회담 시점에서 이미 북미 간 사전에 어느 정도 얘기가 돼 있었을 것”이라며 현장에서 의견대립이 있었을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는 취지의 설명을 덧붙였다.

이어 “(청와대는) 6·12 북미정상회담 전에 중전선언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다”며 청와대가 중전선언문을 미리 준비하는 등의 일도 없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8월에 남북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알 수가 없고 지금까지 얘기된 바도 없다. 남북 간 문제는 진행 상황에 따라 속도가 빨라질 수도, 늦어질 수도 있다”며 “양측에서 고도의 정무적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미 후속협상이 교착상태라는 평가가 있는데, (남북 정상이) 핫라인 통화나 한미정상 통화 등을 준비할 생각은 없나’라는 질문에는 “현재로서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김승호 기자 bada@

〈항공사업법〉

## 외국인 1명만 있어도 vs 절반 넘어야… 면허취소 요건 충돌

# 1700명 직원 생계는 어찌라고…

### 진에어 1차 청문회

6년간 불법등기이사 재직에 소명 “아시아나는 면허취소 안 됐었다”

6일 2차 청문회서 공방 이어질 듯

진에어의 면허 취소 여부를 평가할 1차 청문회가 열렸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진에어측의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31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1차 청문회에선 미국인인 조현민 씨가 6년간 불법으로 등기이사에 재직할 경우에 대한 진에어 측의 소명이 이어졌다.

외국인 등기이사가 1명이라도 있으면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는 항공사업법과 외국인이 임원의 2분의1만 넘지 않으면 등록이 가능하다고 규정한 항공안전법을 고수하는 진에어측의 입장이 팽팽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비공개 청문회를 마친 최정호 진에어 대표이사는 “법리적인 모순점을 집중적으로 소명했다”며 “아시아나항공과의 협력사, 여행업계 등 연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미국 국적의 임원이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사외이사

〈항공안전법〉



최정호 진에어 대표이사(가운데)가 3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청문회장으로 들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로 재직했지만 면허취소를 받지 않았다는 게 진에어 측의 주장이다.

국토부는 다음 달까지 세차례 청문회를 연 뒤, 진에어에 대한 면허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오후 3시부터 시작된 청문회는 2시간이 넘은 오후 5시 10분께 종료됐다. 2차 청문회는 8월6일 열린다.

진에어 관계자에 따르면 면허 취소 시 발생할 수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고용’이라고 전했다. 세 차례의 청문회 이후 진에어의 항공면허 취소가 결정되면 진에어 임직원 1700명의 생계가 위협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진에어는 지난 2017년말 기준으로 2만 4000여명의 주주가 있는 상장기업이다. 면허취소가 결정된다면 막대한 일반 주

주의 손실과 증권시장의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면허 취소가 언급된 지난 5월 시점부터 현재까지 투자자치 하락에 따른 소액 주주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진에어는 하반기 신입 사원 100명 채용을 진행 중이다. 청문회와는 별개로 채용일정은 그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진에어 직원과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는 2차 청문회에 앞서 ‘진에어 직원 모임’은 1일 서울 광화문에서 국토부의 면허 취소 검토에 항의하는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최정호 대표이사는 “앞으로 청문 절차가 남은 만큼 진에어의 입장을 충분히 소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연우 기자 ywj964@metroseoul.co.kr

# ‘사상초유’ 前 위원장·부위원장 구속 공정위, 현직간부 연루될까 ‘노심초사’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파장에 촉각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직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동시에 구속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허탈함과 침통함을 지울 수 없는 분위기다. 특히 현직 간부로 수사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모습도 보인다.

이번 사건이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에 어떤 파장을 미칠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공정위 정재찬 전 위원장과 김학현 전 부위원장은 퇴직간부의 불법 채취업을 도운 혐의(업무방해)로 30일 구속됐다.

공정위 위원장과 부위원장 출신이 한꺼번에 구속된 것은 처음이다.

이날 전 위원장이 자신이 다니던 사찰에 10억원을 기부하도록 SK그룹 측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2003년 구속됐을 때는 부위원장은 포함되지 않았다.

1996년에는 이종화 당시 독점규제와 경쟁정책국장이 기업에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졸졸이 구속돼 파문이 일기도 했다. 이 때는 공정위가 장관급 부처로 승격된 직후였다.

공정위는 31일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검찰 수사를 받는 처지에서 할 말이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결과에 당혹스러운 표정은 숨기지 못하고 있다.

공정위 내부에서는 정 전 위원장은 영장이 기각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김 전 부위원장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한 상황이라 구속 가능성이 클 것으로 봤다.



정재찬 전 위원장 김학현 전 부위원장

공정위는 정 전 위원장 구속으로 전 조직이 퇴직간부 불법 채취업을 위해 움직인 것으로 비칠까 봐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문제는 검찰 수사는 아직 진행 중이라는 점이다. 김동수·노대래 전 위원장으로 수사가 확대될 것이라는 관측이 돌고 있고, 현직 직원들이 검찰에 소환됐다는 소식도 들린다. 조직 내 긴장감이 팽배하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에 차질이 빚어질까 우려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공정위는 다음 달 관련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상조 위원장은 취임 2년차 주요 과제로 38년간 만지가 쌓인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을 꼽고, 특별위원회를 조직하는 등 심혈을 기울였다.

이렇게 야심차게 준비한 공정거래법 개편은 이미 지난달 검찰 압수수색으로 인해 다소 빛이 바랜 상황이다. 공정위는 다음 달 입법예고에 이어 국회 통과까지 가나간 여정에 이번 일이 결림돌로 작용할까봐 걱정한다.

/박인용 기자 parki7854@

# “폭염은 특별재난… 전기료 배려 검토를”

이낙연 국무총리, 산업부에 지시 피해 산업 지원금 신속처리도 당부

이낙연 국무총리는 31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전기요금 부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과 관련, “전기요금에 대해 제한적으로 특별배려를 할 수는 없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폭염이 오래가면 에어컨을 오래 켜고 살아야 하고, 그렇게 되면 전기요금 걱정도 커진다”며 산업통상자원부에 이같이 지시했다.

이 총리는 “이번 폭염은 특별재난에 준하는 것으로 기후변화에 따라 폭염이 상시화·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며 “폭염 대비도 과학적 분석을 토대로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전력수급은 휴가철이 본격화해 조금 나아졌지만 휴가가 끝나는 내 주부터는 전력수요가 다시 늘어날 전망”이라며 “전력의 안정적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는 폭염을 자연재난에 포함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법 개정 이전이라도 폭염을 특별재난으로 인식하고 대처해야 한다”며 “냉방시설을 갖추지 못한 노약자나 바깥에서 일하는 농어민, 건설근로자 등을 지자체와 함께 수시로 점검해 달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정부가 지자체 점검에 앞서서 본인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본인이어야 한다”며 “국민 여러분도 더위에 무리하지 마시기 바란다”고 했다.

그는 “폭염으로 피해를 겪는 농축산업



이낙연 국무총리가 3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 대한 재해보험금, 농약대, 가축입식비, 재해대책경영자금 지원 등이 지체되지 않도록 해달라”며 “폭염에 따른 일부 채소류 가격 급등과 농작물 병충해, 가축 질병에도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총리는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한 부작용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

이 총리는 “근로시간 단축 한 달이 돼 많은 월급생활자가 ‘저녁이 있는 삶’을 찾았다고 반가워하지만 일부에서는 변칙이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우리도 과로 사회에서 벗어날 때가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변화 과정에서 생기는 고통은 최소화해야 한다”면서 “연말까지의 계도 기간을 잘 활용해 ‘저녁이 있는 삶’이 안정적으로 뿌리내리도록 해야겠다”고 말했다.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저임금 근로자 중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를 반기시는

분이 적지 않으나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커졌고 일부 노동자는 일자리를 잃기도 하신다”고 언급했다.

이 총리는 “열악한 상태에 있는 노동자들의 저임금 질곡을 완화해 드리는 것이 옳다”면서 “그러나 다른 사회적 약자들이 고통을 받으시게 해서는 안 되는 만큼 과도기적 고통을 조속히 해소하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주문했다.

그는 “모든 변화에는 진통이 따르는데 진통을 두려워하는 나머지 변화를 거부하면 더 큰 문제가 쌓이게 된다”며 “변화는 수용되되 진통은 최소화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발표된 6월 산업활동동향에서 모든 산업생산이 5월보다 감소한 것을 두고서도 “내외 여건이 녹록지 않고 서민 고통도 크다”면서 “내외 여건과 서민 고통을 겸손하게 직시하고 난관을 국민과 함께 극복해 가야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